



# 낙농정책연구소 낙농소식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 한미 FTA 이후 유제품수입 급증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한미 FTA 발효 이후 2015년까지 약 4년간 미국으로부터의 축산물수입동향을 발표하였다.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KREI 연구보고서 제 121호(2016. 3.14).

그 결과 한미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의 평균에 비해 2015년의 축산물 수입량 및 수입금액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유제품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즉, 한미 FTA 발효 전에 비해 전체 축산물의 수입량과 수입금액은 각각 114.0%와 3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유제품은 분유(탈지 및 전지)의 수입량과 수입금액이 각각 1,339.7%와 1,874.1% 증가해, 전체 축산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치즈로 수입량과 수입금액이 각각 346.4%와 324.9% 증가해, 분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축산물 수입추이(단위: 100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12)(B)	2년차('13)(C)	3년차('14)(D)	4년차('15)(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쇠고기	수입액	653	522	578	764	802	22.8	4.9
	수입량	128	106	101	112	115	-10.1	3.4
돼지고기	수입액	225	391	313	403	455	102.4	12.9
	수입량	98	131	112	121	151	53.6	24.1
닭고기	수입액	54	91	71	96	16	-71.1	-83.9
	수입량	39	54	45	65	11	-72.7	-83.4
치즈	수입액	56	141	188	301	251	346.4	-16.8
	수입량	13	32	43	64	55	324.9	-14.1
분유 (탈지+전지)	수입액	0.9	6.9	24.1	32.7	12.8	1339.7	-61.0
	수입량	0.3	1.9	6.3	8.0	5.7	1874.1	-28.7
전체 축산물	수입액	823	1,411	1,471	1,878	1,761	114.0	-6.2
	수입량	1,071	1,286	1,209	1,357	1,464	36.8	7.9

1)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KREI 연구보고서 제 121호(2016. 3.14).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유제품수입이 감소한 것은 국내의 분유재고누증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 금후 수입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미국을 제외한 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발효 중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의 수입증가와 함께 낙농의 생산기반축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2015년 현재 원유로 환산한 연간 1인당 우유·유제품소비는 75.7kg에 달해 우유·유제품은 이제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품으로 정착한 지 오래다.

그러나 최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음용유의 소비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가운데 우유·유제품의 자급률은 2005년의 73.6%에서 2015년 현재 56.5%까지 하락하였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소비가 늘어나는 치즈, 생크림 등 신선유제품의 국산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국산유제품의 생산확대 및 효율적인 원유수급조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단위쿼터제

의 도입을 위한 '낙농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낙농산업의 두 바퀴라 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유업체가 제도개혁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3분된 집유체계 하에서 낙농제도개혁을 당사자인 낙농가와 유업체에 맡겨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낙농제도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정책의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낙농제도개혁을 미룰 경우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낙농은 지속적인 축소균형을 강요당할 것이며, 그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은 낙농가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 결과 젊은 후계자의 신규진입이 감소함에 따라 마침내 낙농은 한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또한 안전한 고품질의 국내산 우유·유제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칫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사료생산형 낙농경영지원사업」

자급사료생산과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낙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료생산형 낙농경영지원사업」이 2016년부터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1ha당 1만 5천 엔(1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수입조사료의 구입량을 줄이고,


사료재배면적을 늘릴 경우' 1ha당 3만 엔(약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요건을 완화하여 도부현의 낙농가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예산은 68억 엔(약 816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사료작물면적이 북해도의 경우는 두당 40a 이상, 도부현에서는 두당 10a 이상의 낙농가가 지급대상이었다. 또한 퇴비를 적절히 토양으로 환원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8가지 메뉴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시행할 경우 사료작물재배면적(2기작, 2모작의 2기작 및 경종농가에 재배를 위탁하는 경우의 면적도 포함)에 따라 ha당 1만 5천 엔(약 18만원)을 지급해 왔다.

2016년부터는 이 같은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조사료의 사용량을 줄일 경우, 사료재배면적의 확대분에 대해 전술한 1만 5천 엔(약 18만원)에 3만 엔(약 36만원)을 추가하여 ha당 4

만 5천 엔(약 54만원)을 지급키로 하였다. 단, 수입조사료의 삭감수량이 전년대비 사료재배면적 확대 분 1ha 당 1톤 이상일 경우에 한 해 추가 지급대상이 된다. 또한 사료재배면적 확대 분이란, 과거 3년간의 최대 보조금대상면적(신규로 이 사업에 참가하는 낙농가는 전년도에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초과한 면적이 보조금지급대상이 된다.

2016년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급요건의 일부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개선내용은, 환경부하경감에 도움이 되는 8가지 메뉴 중 하나인 「환경부하를 배려한 옥수수 및 수수 등의 사료작물생산」을 할 경우 보조가 이루어진다. 현행 지원대책 하에서 도부현의 낙농가가 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 사료작물 재배면적에 대한 옥수수 및 수수 등의 재배면적비율이 '40% 이상'일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번에 이를 '20%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부현 낙농가의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그동안 낙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료작물의 계약재배' 및 'TMR 센터 양성사업' 등을 추진해 오므로서 지급사료의 생산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된 상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금번 「사료생산형 낙농경영지원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금후 낙농경영에 있어서 조사료생산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일본낙농중앙회의(JDC) 뉴스 제130호(2016. 1.12)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